

그리스 재정위기의 진행 경과와 전망

1. 그리스 재정위기 진행 경과

□ 정부의 재정적자 규모 발표 이후 불신 증폭

- 2009년 9월 그리스 정부는 2009년 재정적자 규모가 GDP의 3.7%에 이를 것이라 추정했으나, 2009년 10월 총선 이후에 사회당 신정부는 재정적자가 GDP의 12.7%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함.
 - 수정 추정치에 따르면, 2009년 중 정부채무는 2,693억 유로로 GDP의 113.4%에 달하며 이에 대한 이자지급액도 GDP의 5% 수준임.
- 수정 통계치 발표 후 그리스와 독일의 10년물 국채 수익률 격차(스프레드)가 2009년 12월 말에 300bp 이상 확대된 이후 2010년 5월 5일 700bp를 기록하는 등 그리스의 국채 수익률이 급등세를 보임.

<그림 1> 10년물 국채 수익률 추이

(단위: %)



자료: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

□ 그리스 국가신용등급은 지속적 하향조정

- 피치(Fitch)는 재정적자 수정치 발표 직후인 2009년 10월 22일에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A-로 하향조정하였고, 무디스(Moody's)도 10월 29일에 하향조정 가능성을 시사하자 그리스 재정위기에 대한 불안이 가중됨.

<표 1> 그리스 국가 신용등급 변동 추이

피치(Fitch)		무디스(Moody's)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	
A (부정적)	2009. 5. 12	A1	2002. 11. 4	A- (안정적)	2009. 1. 9
A- (부정적)	2009. 10. 22	A1 (하향조정 가능)	2009. 10. 29	BBB+ (부정적 주의)	2009. 12. 16
BBB+ (부정적)	2009. 12. 8	A2	2009. 12. 22	BBB+ (부정적)	2010. 3. 16
BBB- (부정적)	2010. 4. 9	A3 (하향조정 가능)	2010. 4. 22	BB+ (부정적)	2010. 4. 27

- 그리스 정부가 2009년 12월에 재정적자 감축안을 발표하였으나, 피치와 S&P는 감축안의 내용이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각각 2009년 12월 8일 및 16일에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에서 BBB+로 재차 하향조정하였고, 이후 그리스의 국채 수익률 및 신용부도스왑(CDS) 프리미엄은 <그림2>와 같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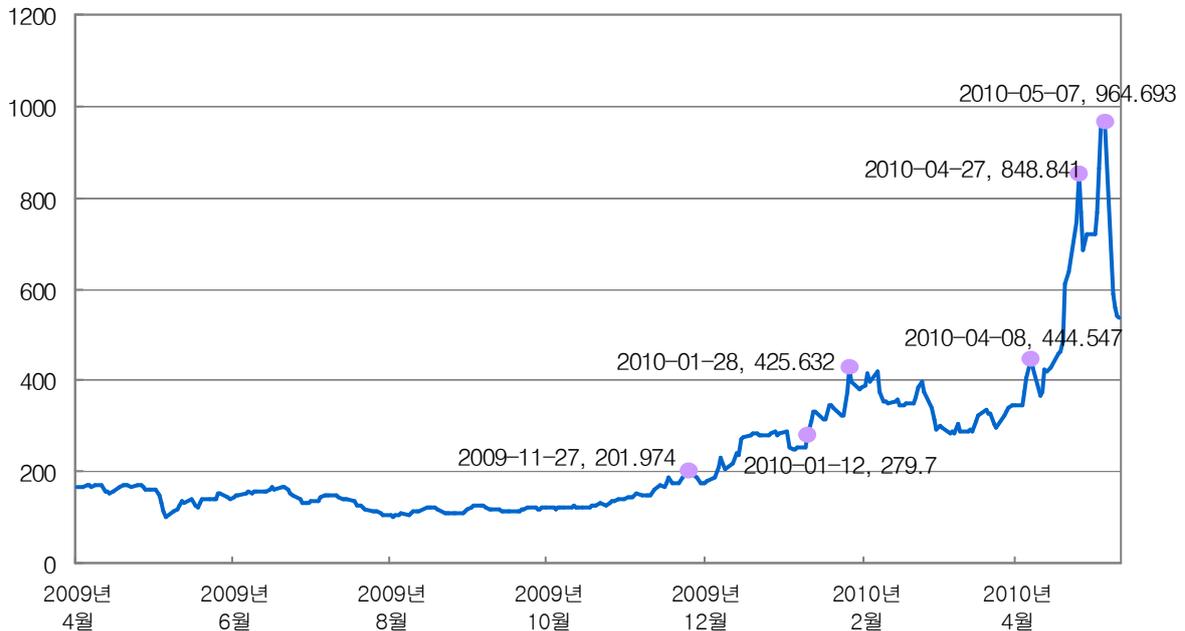
- 그리스 5년 만기 CDS 프리미엄은 2009년 12월 22일의 283.173bp에서 2010년 5월 7일에는 964.693bp로 상승함.

- 그리스 정부는 2010년 1월 14일 구체적인 재정적자 축소안을 포함한 '안정 및 성장' 계획을 EU에 제출하였으나, 1월 12일에 279.7bp였던 그리스의 5년 만기 CDS 프리미엄이 1월 28일에 425.632bp까지 상승하는 등 시장은 동 감축안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

- '안정 및 성장' 계획에 따르면, 그리스 정부는 2012년까지 재정적자 수준을 GDP의 2.8%로 억제하고, 2010년 중에는 재정적자를 97억 유로(4% 포인트 상당) 감축하기로 함.

<그림 2> 그리스의 5년 만기 CDS 프리미엄 추이

(단위: bp)



- 그리스가 3월 30일 국채 시장에서 당초 예상을 크게 밑도는 3.9억 유로 밖에 조달하지 못하는 등 5월 중에 만기 도래하는 채권에 대한 상환 여부가 불투명해지자, 피치는 4월 9일 그리스 국가신용등급을 투자등급 중 가장 낮은 BBB-로 추가 조정함.
- 4월 11일 EU의 금융 지원 패키지 발표에도 불구하고 그리스 국채의 채무재조정에 대한 시장 내 우려가 확산되자 S&P는 4월 27일 그리스 국가 신용등급을 BBB+에서 BB+로 3단계 낮추었고, 그리스 외에도 포르투갈의 등급을 A+에서 A-로, 스페인을 AA+에서 AA로 각각 조정하는 등 그리스 사태가 유럽 전역으로 확대되는 조짐을 보임.
- 무디스도 4월 22일에 그리스의 국가신용등급을 A2에서 A3로 조정함.

2. 그리스 재정위기에 대한 EU의 2010년 대응

□ 그리스 국가부도 방지에 공식 합의(2월 11일)

- 그리스의 재정위기가 스페인,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로 확산될 수 있

다는 우려가 지속된 가운데 EU 집행위원회는 2월 3일 그리스가 제출한 '안정 및 성장' 계획을 승인함.

- 2월 11일 EU 정상회의에서 그리스의 국가 부도를 방지하고 재정위기가 다른 유로존 회원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회원국간 공조를 발표함으로써, EU가 최초로 그리스 국가부도 방지에 대한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함.

□ EU 정상회의에서 IMF의 지원 참여안 합의 도출(3월 26일)

- 그리스의 4~5월 중 만기도래분(200억 유로 규모) 채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EU 정상들은 3월 26일에 프랑스와 독일이 이견을 보였던 IMF의 지원안에 대한 합의에 성공함.
 - 독일은 방만하게 재정을 운용한 그리스의 구조조정 필요성 등을 이유로 IMF의 지원을 수용해 왔으나, 프랑스는 IMF의 개입이 유로존 자체의 경제위기 해결 능력을 약화시킨다는 이유로 반대해 왔음.
- 따라서 그리스 지원은 그리스 정부의 자체적인 시장 조달이 불충분한 경우에만 EU 회원국이 개별적으로 대출하는 형태로 지원기로 결정됨.

□ 그리스를 위한 금융 지원 패키지 발표(4월 11일)

- 3월 30일 그리스의 정부채권 발행을 통한 자금 조달실적이 저조하자 또다시 CDS 프리미엄이 상승하고, 남유럽 국가로 문제가 확산될 수 있다는 불안이 다시 팽배하자 EU는 4월 11일 재무장관 회의에서 2010년 중 그리스에 최대 300억 유로를 지원하는 금융 지원 패키지를 발표함.
 - 이에 따르면 2010년에 개별 회원국이 3년 만기의 대출 형식¹⁾으로 그리스에 최대 300억 유로(2012년까지 총 450억 유로)를 지원하게 되며, 지원 금리는 최근 그리스의 시장 조달금리와 재정난을 겪고 있는 포르투갈 등 타 회원국의 조달금리의 중간인 5% 수준을 적용하기로 함.

1) 유로존 회원국간 구제 금융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조항의 위반에 대한 논란, 방만한 재정 관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 개별국가의 대출 형식을 적용하게 된 것임.

□ 그리스에 대해 IMF와 공동 지원안 발표(5월 2일)

- 4월 23일 파판트라우(George Papandreou) 그리스 총리는 EU와 IMF에 긴급 자금을 요청할 것이라고 발표하였음.
 - EU 통계청(Eurostat)이 그리스의 2009년 GDP 대비 재정적자 수준이 기존의 12.7%에서 13.6%에서 재조정되었으며 통계수치가 부정확하여 향후 다시 변경될 수도 있다고 발표하여 국제 금융시장이 크게 동요하는 가운데 그리스의 공식 요청이 이루어졌음.
- 그리스 국채 보유자들에게 지급유예나 삭감 등을 요청하는 채무재조정에 이르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확산되고 남유럽 국가의 신용등급 하향 조정으로 시장 불안이 다시 증폭되자, 5월 2일에 EU와 IMF는 그리스 지원 규모를 1,100억 유로로 확대하는 구제 금융안을 공식 발표함.
 - 유로존 회원국의 대출(금리는 5% 수준) 800억 유로 및 IMF의 대기성 차관 300억 유로
- 5월 7일에 독일 의회가 그리스 지원안을 승인한 데 이어 EU 의회에서 잇따라 지원안이 승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그리스 국채 전부를 연장한다 해도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국채 만기와 중복될 경우 그리스 위기가 포르투갈, 스페인, 이탈리아 등 유로존 전체로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팽배함.

□ IMF와 더불어 7,500억 유로의 유럽 재정안정기금 조성 결정(5월 11일)

- 특히, 그리스 사태가 유로존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EU 재무장관은 긴급 회의를 열고 5월 11일에 총 7,500억 유로에 달하는 유럽 재정안정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정함.

<표 2> 유럽 재정안정기금 구조

구 분	EU 집행위원회	유로존 16개국	IMF
조 성 액	600억 유로	4,400억 유로	2,500억 유로
조성 방법	EU 집행위의 예산을 기준으로 채권 발행	ECB 지분율에 따라 회원국에 배분	회원국의 출자 비율에 따른 배분
지원 방식	차관형태로 제공	특수목적회사 설립을 통한 대출과 지급보증 방식으로 지원	미 정

자료: IMF 보도자료

- 유럽 재정안정기금을 조성하기로 결정된 직후 그리스는 EU와 IMF에 최초 자금의 집행을 요청하였고, IMF가 5월 12일에 55억 유로를 지원한 데 이어, EU가 85억 유로 규모의 채권 만기(5월 19일) 하루 전인 5월 18일에 145억 유로를 집행함.
- EU와 IMF는 2차 지원금을 8월 중에 제공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며, 분기별로 재정적자 감축안의 이행 성과를 점검한 후 자금을 집행할 계획임.

□ EU 회원국의 긴축재정 조치 시행 강화

- 그리스 위기에 따른 유로존 불안의 원인이 취약한 국가 재정상태임에 따라 EU 회원국들은 연이어 재정 건전성 제고를 위해 긴축재정정책안을 발표함.
- 재정위기에 취약한 국가로 거론되는 스페인과 포르투갈은 공공부문 임금 삭감 및 동결, 부가가치세 인상 등으로 재정적자를 감축하기로 결정하였으며, 이탈리아는 61억 유로가 소요되는 시칠리아대교 건설사업의 중단 등 공공 투자를 보류하기로 함.
- 독일은 연금 수혜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높이기로 하고, 프랑스는 2011년부터 3년간 공공지출을 동결하기로 함.
- 유로존 회원국이 아닌 영국은 2010년 중 60억 파운드의 공공지출을 줄이고, 각료 임금을 금년에 5% 삭감 후 향후 5년간 동결하기로 하였으

며, 덴마크도 공공부문 지출 동결 및 부자 감세조치 연기안 등을 발표함.

<표 3> 그리스 사태에 대한 EU의 입장 변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u>2월 11일 EU 정상회의</u><ul style="list-style-type: none">- 그리스의 국가 부도 방지 및 유로존 회원국으로의 그리스 재정위기 확산 방지 공조에 대해 합의· <u>3월 26일 EU 정상회의</u><ul style="list-style-type: none">① 그리스 문제 해결을 위한 IMF 참여안에 대해 합의② EU 집행위원회 및 유럽중앙은행(ECB)이 그리스의 자체적인 시장 조달능력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만 시장 금리에 근접하는 수준에서 개별 회원국으로부터 대출의 형태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합의· <u>4월 11일 EU 재무장관 회의</u><ul style="list-style-type: none">- 2010년 중 유로존 개별 회원국이 3년 만기 대출 형식(5% 수준의 금리)으로 최대 300억 유로를 지원하고 2012년까지 3년간 총 450억 유로를 지원하기로 합의· <u>5월 2일 IMF와의 공동 구제금융안 공식 발표</u><ul style="list-style-type: none">- 지원 규모를 1,100억 유로로 확대(유로존 회원국 지원 800억 유로, IMF 대기성 차관 300억 유로)· <u>5월 11일 7,500억 유로 규모의 유럽 재정안정기금 조성 결정</u><ul style="list-style-type: none">- 유로존 국가의 재정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IMF와 공동으로 총 7,500억 유로의 재정안정기금 조성 결정

자료 : 필자 정리

3. 전망

□ 재정 불량국에 대한 제재 강화 전망

- 2001년에 12번째 회원국으로 유로존에 가입한 그리스는 가입 당시 정부채무가 GDP의 100%에 달했으나, 가입 이후에 EU 회원국으로서 해외 차입이 용이해짐에 따라 외채규모가 누적되어 왔음.
- 그리스는 연금이 퇴직전 임금의 96%에 달하는 등 재정을 방만하게 운용하여 재정위기가 촉발됨.
-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의 재정위기 여파가 유럽 뿐만 아니라 여타 지역으로 확산된 가운데, 유로 통합체계에 대한 의구심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음.)

- 그러나 주권 훼손 등의 이유로 재정통합에 대한 회원국의 합의를 도출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EU의 '안정 및 성장' 계획³⁾을 위반하는 재정 불량국에 대해 회원국들이 제재 방안을 강구할 것으로 전망됨.

□ 우리나라의 대 EU 수출 감소 예상

-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 차입금 중 유럽계 자금이 전체 40% 수준(800억 달러)에 이르는 상황에서 글로벌 시장불안 지속으로 유럽계 자금이 이탈할 경우 국내 금융시장에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됨.
- 중장기적으로는 2009년 기준 우리나라 총수출의 12.8%⁴⁾를 차지한 EU의 주요 회원국들이 긴축재정 정책으로 선회함에 따라 우리나라의 수출이 감소될 것으로 보이며, 최악의 경우 유럽 재정위기의 장기화로 중국과 미국의 경기도 위축되면 우리나라의 수출 실적 악화가 우려됨.

【이진경, 인턴 신나리】

2) IMF와 EU 일각에서는 재정통합까지 거론되고 있음.

3)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거, 재정적자와 국가채무를 GDP 대비 각각 3%, 60% 이내로 유지하기로 합의함.

4) EU는 우리나라의 제2위 교역대상국이자 제1위 투자대상국임.